

# 산업부, 조선업 역대 최대규모 지원 친환경·AI·국산화 등 3200억 투입

글로벌 경쟁 대응... 시장 우위 유지  
34개 신규기술개발 과제 본격 추진  
AI 조선소 구현·자율운항선박 실증

정부가 올해 3000억 원대의 자금을 투입해 국내 조선 산업의 세계시장 우위 유지를 지원한다. 조선업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의 확대를 추진하고 친환경 경선박 기술개발 독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 대비 23% 늘어난 3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K-조선 수출실적은 지난해 318억 달러에 달했다. 최근 8년 사이 최대를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증가(7000억 달러 돌파)에 기여한 것. 세계 수주 점유율이 20.2%로 전년대비 6.2%포인트(p) 늘었고 대형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는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하지만 경쟁국들이 바짝 따라붙고 있는 데다 국제 패러다임까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형 조선사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추진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선업 특화 AI 기술의 업계 확산을 위해 생산공정 및 자율운항선박 등 제조·운항 전반에 적용한다. 정부는 그간 인력의존도가 높았던 조선업 공정 특성상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AI 조선소 구현을 위해 수십 톤(t) 단위의 중대형 선박 블록조립자동화 기술, 부재·블록·기자재를 이동형 무인로봇이 운반하는 물류관리 기술 등 고난도 작업 공정의 자동화 및 작업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 AI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운항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운항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기자재의 국산화 및 중소조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쇠방선의 설계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 ▲중소조선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선의 전기추진시스템 개발 ▲자율운항·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예인선 개발 ▲중소조선소의 협동로봇 현장운용 시스템 개발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coul.co.kr



김영훈 노동부 장관, 워킹맘&대디 멘토단 발대식 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워킹맘&대디 멘토단 발대식 및 타운홀미팅에서 멘토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 농진청, 브라질 농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브라질 농업정부기관 협력 강화

농진청이 브라질 농업정부기관과 '농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4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이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 최대 농약시장인 브라질과 농업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국내 농약 관련 기업의 시장진출 및 수출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돈 농진청장(사진)은 카를루스 엔히키 바케타 파바루 농업축산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농약 인허가 간소화 협력기관인 브라질 농업축산부, 위생감시청, 환경청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화학농약과 생물농약에 대한 규제제도, 등록과정 및 평가과정 등의 정보 교류에 나선다. 농진청은 또 기후변화 대응 국제 농업 현안을 해결할 공동연구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브라질 농업연구청과도 협약을 맺었다.

이승돈 청장은 같은 날 실비아 마리아 폰세카 실베이라 마스루하 브라질 농업연구청장과의 면담을 갖고,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두 기관은 미생

물 기반 농약·비료의 브라질 현지 실증, 버섯 유전자원 발굴 및 재배 자동화 기술 개발 분야 공동연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 상호 방문 및 교육·프로그램 시행,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등 인적 교류와 공동 활동을 통해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농약 시험·평가 기술이 브라질 측에서 동등하게 인정될 경우, 농약 등록에 드는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브라질은 농약 인허가 기관이 3개로 분산돼 농약 등록에만 평균 7~8년 이상이 걸린다. 이를 약 5년 단축할 경우, 제품 1개당 1300억 원 이상의 초기 수익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승돈 청장은 "이번 한-브라질 MOU 체결은 농약 수출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농업기술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농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도 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노란봉투법 '구조적 통제' 기준 완화

고용노동부 시행령·해석지침 확정  
교섭단위 분리제도 활용 방안 마련

다음 달 10일 시행에 들어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 등이 확정됐다. 정부는 그간 노사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했다. 또 해석지침에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내놨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절차 등을 담은 개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

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 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교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고용주를 판단하는 기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향후 시행령을 기준으로 교섭과 관련해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석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시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침은 행정예고 후 '구조적 통제'가 불법과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노동부는 구조적 통제와 불법과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외 사용자가 관련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의사결정 등을 제한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하에서 인정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보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식품부, '니가타 농업전시회' 한국관 운영

K-농기자재 수출 확대 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니가타 농업박람회)에서 우리 기업의 농기자재 수출 지원에 나선다. 니가타 현은 일본 내 대표적인 농업 생산지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니가타에서 개최되는 '2026 니가타 농업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시에서는 농기계·시설자재, 친환경 농자재, 비료, 사료 분야

14개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 일본 바이어 대상의 제품 홍보 및 수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자동화와 6차 산업화, 생산성 향상을 주요 주제로 약 200개 기업과 1만20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대형 B2B 행사다. 정부는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시장 정보 제공부터 현장 네트워킹까지 종합 지원에 나선다.

박람회 전 날에는 일본 농업 시장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 현지 시장동향 및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고, 행사 기간에는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또 일본 대형 유통기업 및 농산업 기업과의 비즈니스 리셉션도 마련한다.

참가 기업들은 이번 행사가 기존 협력 관계를 실제 수출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식품 전후방 산업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업계와 협력해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기후부, 운수업계 전기·수소버스 도입 지원

구매용자 사업... 차량 한 대당 2억

운수업계의 친환경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용자' 사업이 새로 도입됐다. 정부가 신설한 올해 구매용자 예산은 735억 원 규모로, 운수업자 등은 차량 한 대당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용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부터 자금 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용자 지원을 통해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계획적인 차량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모자라는 차량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대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된 시중은행 14개사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 대출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5년 상환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오는 25일부터 별도 공고를 통해 일주일간 추가로 모집한다.

대출금리는 기후부 고시금리에 따라 운영하고, 정책용자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려는 구역·노선·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수소버스 구매용자 사업은 구매 단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수업계의 탈탄소 녹색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